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6800 |
|----------|------|

발의연월일 : 2024. 12. 20.

발 의 자 : 김선교 · 김성원 · 김위상
구자근 · 최보윤 · 최수진
김상훈 · 안태준 · 강대식
윤상현 · 박충권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한강, 북한강 및 경안천의 양안(兩岸) 중 특별대책지역은 그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은 500미터 이내의 지역 중 필요한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하수처리구역 등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발생 오수를 전량 공공하수처리함에도 불구하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편입이 늦어져 수변구역 지정 해제 대상이 되지 못한 지역의 경우에는 불합리한 재산권 제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

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수변구역 지정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완화하고 정부의 수질보전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2호 삭제).

법률 제 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해제 등) ①·② (생략) ③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u>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u> ④·⑤ (생략) |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해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④·⑤ (현행과 같음) |